

교통정책과	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
성 과 요 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서비스 강화 ◦ 도민 체감형 광역 대중교통망 및 환승체계 확대 ◦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으로 도내 교통사고 감소

□ 추진배경

- 노약자, 장애인,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
- 도내 주요 거점 도시 간 경제·생활권역 확대로 광역통행량은 지속 증가 추세
 - ※ 창원-부산 통행량(일) : ('17) 74,539 → ('20) 130,567 → ('30) 185,497 → ('40) 206,804 ※ 출처 : 국가교통DB
- 어린이 교통사고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로 교통안전체계 중요성 부각

□ 추진실적

- **(교통복지)** 교통약자 및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강화
 - 알뜰교통카드(12개 시군→18개 전시군), 저상버스(866→1,022대), 특별교통수단(374→387대), 바우처택시(305→600대), 브라보택시 확대(877개 마을→899개 마을), 도 단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(배차실적 822→1,009천건) 등 도민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
- **(광역교통)** 도민 체감형 광역 대중교통망 및 환승체계 확대로 교통편의 제고
 - 통영~거제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('23.3.27.) 및 거창~합천간 광역환승할인제 업무협약('23.4.26.)을 체결하였으며, 창원~부산, 통영~고성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실무 협의를 추진중이며, 3개 광역환승센터(양산 북정역 등) 구축 추진중
- **(교통안전)**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인프라 구축으로 도내 교통사고 최소화
 -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교통량은 급증하였으나, 전년대비 사망자는 지속 감소
 - (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) '22년 215명→(결과) '23년 188명 ※ 23년 10월 기준(경찰청 자료)
 - ※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: '22년 23건(사망자 1명)→(결과) '23년 18건(사망자 0)(△21.7%)

□ 주요 성과(결과)

- **(중앙부처 평가)** 국토부 주관 「시도 교통문화지수」 A등급(전국 2위) 달성
 - 최근 3년간 순위 : ('20년) 15위(D등급) → ('21년) 8위(C등급) → ('22년) 2위(A등급)

○ **(공모사업)**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국비 273억원 확보

(단위 : 억원)

공모사업명	주관기관	사업량	총사업비				사업효과
			합계	국비	도비	시군비	
합 계			547.6	273.4	80.7	189.5	
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	국토부	기본계획 용역 및 구축 1식	543	270	80.7	188.3	미래 교통서비스 선제적 도민 제공 ※ 전국 4개 도시 선정
국도 감응신호 지원사업	국토부	국도 14,79호선	4.6	3.4	-	1.2	교통정체 해소 교통안전 향상

- **(법령개정)** 국회의원·국토부 수시 방문, 적극 건의하여 도민 교통편익 증대 기반 조성
- (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) '23. 7. 18. 개정으로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 추진 근거 마련
※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 사업비 : 26,500백만원(국 1,920 도 11,780, 시 12,800)
 - (광역교통법 시행령 제2조) '23. 10. 19. 개정으로 밀양거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국비(환승센터 등) 30~50% 법적 지원 근거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보 근거 마련
- **(교통복지)** 장애인,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
- (특별교통수단 확대) '22년 374대 → (결과) '23년 387대(증가 13대)
 - (바우처택시 확대) '22년 305대 → (결과) '23년 600대(증가 295대)
 - (브라보택시 확대) '22년 877개 마을 → (결과) '23년 899개 마을 확대(증가 22개)
 - (교통약자 저상버스 확대) '22년 865대 → (결과) '23년 1,022대(증가 157대)
 - (알뜰교통카드 확대) '22년 11,912명 → (결과) '23년 23,029명(도민 1인 월 15천원 절감)
※ 개선사항 : '22년 12개 시군 시행 → (결과) '23년 전 시군 확대('24년 하반기 k-패스 도입)
 - (특별교통수단콜센터 운영) '22년 배차실적 822천건 → (결과) '23년 1,009천건(증가 187천건)
※ 개선사항 : 회원제 시행,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, 창원권역 대기순번 개선 등
- **(광역교통)** 도민 체감형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
- 통영~거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('23. 3. 27.) : 주민 1인당 월 63천원 절감
 - 거창~합천 광역환승할인제 업무협약('23. 4. 26.) : '24년 상반기 시행 예정
※ 창원~부산, 통영~고성 광역환승할인제 '24년 시행 관련 현재 실무협의 중
 - 창원 BRT 공정률 50%('23.11월) : 개통('24.3월) 시 버스운행 14분 단축, 버스 이용 11.3% 증가
* BRT(간선급행버스 시스템) : Bus Rapid Transit
 -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(도로확장→8차로, 택시대기 9→53면, 회전교차로 설치 등 '23.6.20.),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착공('23.3.27.),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 설계('23.11.) 추진

- **(교통안전)**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추진체계 강화 ※ 23년 10월말 기준(경찰청 자료)
 - (어린이 교통사고 감소) '22년 23건(사망자 1명)→ (결과) '23년 18건(사망자 0)(△21.7%)
 - (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) : '22년 2개소 → (결과) '23년 162개소(증가 160개소)
 - 유관기관 회의안전점검 등(20회) → (결과)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7명감소(△12.6%)
 - 어린이보호구역,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(357개소, 116억원)
- **(교통안전교육)**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
 - (연수원, 배달라이더 교통안전교육 전국 최초 시행) : '22년 0명 → (결과) '23년 169명(증가 169명)
 - (노인, 어린이 등 도민 교통안전교육) : '22년 129천명→ (결과) '23년 138천명(증가 9천명)
- **(미래교통)**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등 도민 미래 교통서비스 제공 선제적 추진
 - (전국 최초 「농촌형 버스」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) : 국토부(하동, '23. 6. 27)
 - (거제시 DRT시범사업) 운행거리 (기준) 600.8km → (결과) 410km(일 최대 30% 감소)

※ 사업효과 : 불필요한 회차(11회) · 운행거리 190.8km · 운영비용(15%) 감소 예상, 호출 및 대기시간 안내를 통해 DRT이용자 실 대기시간 제로화 유도(기준 30~40분)

* DRT(수요응답형 대중교통플랫폼) : Demand Responsive Transport

 - (버스 운행정보 제공 등 광역 BIS 구축) '22년 8개소 → (결과) '23년 10개소(증가 2개소)
 - (스마트 교차로 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) '22년 누적 802개소→ (결과) '23년 935개소(증가 133개소)

* BIS(버스정보시스템) : Bus Information System
- **(적극행정)** 시외·시내·농어촌버스 정상운행을 위한 노사 합의 도출 등
 - (버스파업) '23. 4월. 창원시내버스 파업대비 적극 중재(도→시군, 경찰, 19개 버스 업체)
 - (대중교통 개선) 거제 2000번 노선연장 관련 7년간 미해결 민원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
→ (경과 사항)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회사간 노선 경합으로 노선조정 어려움
→ (최종 합의) 시내버스 종점 연장(연초→고현) 합의('23. 11. 8.)로 도민 교통편익 증대
 - (태풍, 폭설 등 자연재해)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시군경찰도로교통공단 등 협력 체계 구축
- **(탄소저감)**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수단(시설) 도입 대폭 확대(국정과제, 도정과제)
 - (전기자동차) '22년 누적 23,284대 → (결과) '23년 30,071대(증가 6,787대)
 - (전기충전소) '22년 8,113기 → (결과) '23년 13,831기(증가 5,718기)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일부 농어촌 등 벽오지 지역 광역교통서비스 수혜실적 미흡 → 시책 발굴 및 홍보 강화